

개·폐회식장 대립산업이 건설

〈평창올림픽〉

두 차례 유찰된 올림픽플라자 공사 기본설계 말기로
조직위와 공동 TF 구성 설계 완료 후 최종 참여 결정
10월 말 본 공사 착수 전망 ... 오늘 평창올림픽 현안회의

속보=2018평창동계올림픽 개·폐회식장 등이 포함된 올림픽플라자 건설 공사를 대립산업이 맡기로 했다.

올림픽플라자 건설공사는 사업비가 부족하고 공사기간이 짧아 두 차례의 조달청 경쟁입찰이 모두 유찰되는 등 시공사를 찾지 못해 적기 완공에 비상(본보 지난 6일자 1·3면 보도)이 걸렸었다.

▶ 관련기사 3면

대립산업 고위 관계자는 16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지난 15일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와 시공사 참여 문제를 논의

한 결과, 대립산업이 우선 기본설계를 시행하고, 사업비, 공사기간 등의 설계 결과물이 나오면 우리가 최종 시공사로 참여할 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즉시 조직위와 공동TF 팀을 구성해 기본설계에 착수, 오는 9월26일 설계를 마칠 예정"이라며 "이를 토대로 조직위와 다시 논의해 대립이 공사를 맡게 된다면 오는 10월 말께는 본 공사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본설계를 담당했던 시공사가 본

공사에 참여하지 않았던 전례가 없어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경우 대립산업이 올림픽플라자 시공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조직위는 이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2017년 9월 완공 목표까지 24개월의 공사기간을 확보하게 된다.

조직위 측은 기본설계 결과 총 사업비 견적이 조직위가 제시한 940억원을 초과할 경우 비용을 올림픽 스폰서십으로 해결할지, 또는 전광판 시공 등 일부 과업을 줄여줄지 등에 대해서는 추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17일 열리는 국무조정실 평창동계올림픽현안회의에서는 평창올림픽플라자 시공사 결정 추진안 등 주요 시설 진행 상황 등이 보고될 예정이다.

이성현기자 sunny@kwnews.co.kr

“국가발주공사 철사업체 제한”

강원건설단체聯 정부 건의키로

속보=도내 건설단체들이 정부와 지자체에 철사업체의 건설공사 참여 제한을 요구하기로 했다.

강원건설단체연합회는 16일 춘천시 동면 건설협회 도회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철사업체 전입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최근 원주·강릉복선전철 관련 전기공사 8건을 발주(본보 5월26일자 8면, 지난 7일자 8면 보도)하면서 철사업체에 패널티를 부과하지 않아 도내 업체의 참여율 및 수주금액이 크게 감소, 지역 건설업계의 공분을 샀다. 외지업체와 철사업체들이 80% 이상 수주하면서 도내 토종기업 수주금액은 16.9%인 153억원에 불과했다.

차부환 전기공사협회 도회장은 “평창올림픽 관련 공사가 본격화되면서 지역의 의무공동도급 제도를 악용한 철사업체들이 도로 몰려들어 있다”며 “경쟁력이 약한 지역업체는 철사업체에 밀려 공사에 참여하지 못해 경영난이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이와 관련 국가발주공사의 지역업체 참여 확대와 철사업체 참여 제한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정부 및 지자체에 보낼 계획이다. 하위윤기자

공사기간 빠듯 ... 한 치 오차도 허용 안 돼

올림픽 주요 시설 진행상황·과제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폐회식장이 들어설 올림픽플라자 시공사를 찾으며 경기장 등 주요 시설이 모두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도와 조직위는 여전히 부족한 사업비와 빠듯한 공사기간이라는 난제를 안고 있어 주목된다.

올림픽플라자는 2017년 9월까지 모든 공사를 마무리해야 한다. 오는 10월 착공해도 24개월밖에 시간이 없다. 동계올림픽은 2018년 2월9일에 개막하지만 무대 설치와 개·폐회식 세라미니를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당초 올림픽플라자의 정상적인 공사기간은 36개월이었다. 하지만 예산 절감과 개·폐회식장 이전 문제로 1년여의 시간을 허비하면서 24개월짜리 빠듯한 프로젝트로 변경됐다. 절대공기의 마지노선에 서 있어 한 치의 오차도 없어야 함은 물론 기상상태도 도와줘야 하는 상황이다.

오는 9월 말 완료 예정인 기본설계 결과에 따른 과업 축소 여부도 관건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940억원의 예산을 확정할 반면 업체에서는 사업 규모로 볼 때 최소한 150억원 이상은 더 소요



사업비 수백억원 부족 상황 정부 예산증액 난색 대책 필요

된다 입찰이다. 조직위는 사업비 초과 부분은 일부 임시건설 형태로 변경하고, 과업을 축소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아직은 미지수다. 정선 알파인경기장과 보광스노보드 경기장은 국제스키연맹(FIS)에서 요구하고 있는 조형시설 설

치가 뜨거운 감자다. 당초 예산에 조형설치는 없었지만 올림픽기간에 시차가 정반대인 유럽인들을 위한 생중계 문제로 국제스키연맹이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사안이다. 경기장 한 곳에 200억원 가까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지만 문제는 조직위의 문화체육관광부 어느 곳도 예산 부담 문제에 딱부라지게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올림픽경기장 총 사업비는 당초 6,993억원에서 1차 조정 결과 7,637억원,

2차 조정에선 8,063억원으로 증가했다. 이달 말 예정인 3차 조정에서는 컬링경기장 73억원과 각종 범정경비 등 최소 200억원 이상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경기장 조형시설은 4차 조정 때에나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정부는 예산 증액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돈이갈 곳은 많고 시간이 별로 없는 도와 조직위 관계자들의 입술이 바짝바짝 타들어가고 있다. 이성현기자 sunny@kwnews.co.kr

도 기획조정실장에 김명선

한만수 처장 이사관 승진

도 고위공무원의 교육과 잇따른 명예퇴직 등으로 공석이 된 후속 인사가 이달 말까지 마무리된다.

행정자치부는 다음 달 미국으로 파견교육을 가는 김성호 도 기획조정실장(고위공무원단) 후임에 양양 출신 김명선(50) 지역발전과장을 오는 24일자로 발령할 예정이다. 양양고, 성균관대, 서울대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행정고시(36회)를 통해 공직에 입문해 경기도 외



◇김명선 과장



◇한만수 처장

자유처립장, 수원시 권선구청장, 안전행정부 주민과장 등을 역임했다.

도는 조광수 강원발전연구원 정책연구위원의 명퇴로 생긴 이사관(2급) 승진자로 한만수(57) 도의회 사무처장을 확정했다. 명예퇴직 한 김순녀 2018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시설과장(3급) 후임에는 손창환 도 도로철도교통과장이 유력하다. 김석민기자

강원도 유일의 가사, 행사별 전문분야 등록 법무법인 일련 김혜란 변호사
· 윤현익(68)

“전기공사 하반기 400억 발주 외지·철새업체 독식 막아라”

지역업체 보호책 마련 시급

속보= 지난 6월 1100억원 규모의 원주~강릉간 복선전철 전기공사 대부분을 외지업체와 ‘철새업체’가 수주해 논란(본지 6월 30일자 1면·7월15일자 2면)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하반기에 400억원 규모의 발주 물량이 예정돼 있어 지역업체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6일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원주~강릉간 복선전철 신호설비 공사는 총 4건으로 400억원이 투입된다. 구간별로는 △대관령~강릉 85억원

△횡성~평창 110억원 △평창~대관령 95억원 △서원주~횡성 110억원이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11월 사업발주를 하고 12월 위탁업체를 선정한다.

이와 관련 도내 업체들은 상반기처럼 외지업체가 독식하거나 지역의무공동도급마저 ‘철새 업체’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크라며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도와 도내 업체는 철새 업체 방지 방안으로 △해당지역의 영업활동이 소재지 전입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의 기간이 180일을 초과하면 감점이 없고 △180~150일이면 -1점 △150~120일 -2점 △120~90일 -3점 △90~60일 -4점 △60일

이하인 업체는 -5점 등의 패널티 부여를 제시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 관계자는 “철새 업체가 비정상적인 루트로 사업을 위탁받는 것은 제재할 필요가 있다”며 “하지만 국가계약법 개정은 형평성 등의 문제로 부작용이 발생하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성준

▶ 관련기사 6면

책 읽는 춘천

춘천시립도서관

도서 대출서비스 확대

○ 대출 시간: 오후 6시까지

○ 대출 건수: 최대 5권까지

※ 삼천동 본관은 밤 10시까지

문의 춘천시립도서관 ☎245-5103

“철새 독식 막을 제도 허점 보완해야”

입찰일 앞두고 주소 도내 이전 반복
철도시설공단 대책 마련 ‘지지부진’

■철새업체 지역의무공동도급 잠식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지난 5월말부터 원주~강릉 복선전철 전력설비 공사 등 1189억원 규모의 8개 공사에 대한 입찰을 진행한 결과, 8개 업체가 선정됐다.

이중 5곳은 외지 업체며 3개 업체는 도내 업체다.

하지만 강원도 업체인 3곳 모두 입찰을 한달여 앞두고 지난 4월 서울에서 춘천으로 주소지를 옮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업체들은 강원도 업체로 분류되면서 지역의무 공동도급제 혜택을 받았다.

결국 무늬만 강원도 업체의 철새업체들은 서울, 경기 업체와 공동도급

‘철새업체’들이 원주~강릉간 복선전철 전기공사를 독식하고 있다. 정부가 추경을 통해 관련 공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여 도로 주소지만 이전하는 ‘철새 업체’들이 늘 것으로 예상된다. 항도업체들이 제도적 장치를 요구하며 ‘철새업체’들에 대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철새업체들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을 짚어본다.

을 맺어 도내 업체들에게 피해를 입혔다.

■적격심사제도 보완 절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올해 초 전기공사 실적 없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기준을 기존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확대했다.

지역 업체의 진입을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였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형 건설사들에 유리한 조치였다.

실제 이번 낙찰 컨소시엄의 구성사들을 살펴보면 두산건설, 포스코엔지니어링 등 대형 건설사들이 이름을 올렸다.

도내 전기공사 업체는 컨소시엄 구성사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에 따라 당락이 결정되는 적격심사제도를 지적하고 있다.

지역 업체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입찰참가의 실적제한은 완화됐다. 그러나 실적제한이 사라지면서 경

■원주~강릉간 복선전철 신호설비
하반기 공사 현황

공사명	예산	발주시기
대관령~강릉	85억원	11월
횡성~평창	110억원	
평창~대관령	95억원	
서원주~횡성	110억원	

영상태평가가 적격심사제도에서 중요한 항목으로 떠올랐다.

결국 영세한 도내 업체들의 평균 신용평가등급은 ‘B+’ 불과, 공사 수능력 기준인 ‘A+’에 못 미치는 상황이다. 철도공단이 제시하는 경영평가 점수를 적용할 경우 만점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도내에서 1.81%에 불과하다.

■철도건설법 계약예규 마련돼야
‘철새 업체’가 도내에서 사업을 수

주할 수 있는 것은 철도건설법의 맹점이 이용됐기 때문이다.

현재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공사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대회 및 장애인 동계올림픽 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동계올림픽 관련 공사에서 지역기업 우대기준을 적용받는다.

하지만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사업은 국가계약법이 적용되므로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자격에 충족한 업체는 사업을 위탁받을 수 있다.

이처럼 지방계약법과 동계특별법을 적용받지 않으니 ‘철새업체’는 입찰일을 앞두고 도내로 주소를 이전, 사업을 수주한 후 공사가 완료되면 다시 주소지를 옮기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한국철도시설공단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제도상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지지부진한 상태다.

국가계약법에 계약예규를 적용하기 위해선 정부와 기획재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입법화돼야 하기 때문이다.

강원건설단체연합회 관계자는 “국가 발주하더라도 도내에서 시행되는 사업에는 도내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며 “하반기 사업 발주가 시작되기 전에 도내 상황에 맞는 분리발주 등 철도건설법 계약예규 마련 마련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준 kwwin@kado.net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미이행 '피해'

원주~제천복철 공사업체 자금난 공사 중단 장비대여금 미지급...영세업체 피해 불가피

원주지역 건설사업 현장에서 건설기계장비 임대차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영세 건설기계장비 업체들이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16일 원주지역 건설기계장비 대여 업체들에 따르면 중앙선 원주~제천 복선철도 제1공구 일부 구간을 맡고 있는 A업체가 원청으로부터 기성금을 받아 놓고도 공사에 참여중인 건설기계장비 대여 업체들에게 장비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특히 A업체가 이들 대여 업체와 건설기계장비 임대차 계약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금난으로 지난 달 16일부터 공사를 전면 중단한 것으로 알려져 대여 업체들

의 장비대금 채불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A업체가 부도날 경우 대여 업체들이 겪게 될 피해 규모는 3억 6000여만원에 달하며, 부도가 난 업체를 대신해 원청이 지급을 나서도 절반밖에 집행되지 않아 대여 업체들의 피해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피해가 발생하자, 원주시는 16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지역 내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건설기계장비 임대차 계약 이행 여부에 대한 실태 특별조사에 착수했다.

주요 대상은 원주~강릉 고속철도와 광주~원주 고속도로, 올해 시발주 건설공사 중 건설기계 대여가 포함된 건설현장이며 철저

한 조사를 위해 건설기계연합회와 건설노동조합의 협조를 받아 진행된다.

시는 건설기계장비 임대차 계약서를 미작성할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원주/정태욱 tae92@kado.net

평창서 기소중지 검거 1위

평창경찰서(서장 김광식)가 강원지방경찰청에서 주관한 올해 기소중지특별검거 기간중(5월 11일~6월 30일) 최고의 검거실적으로 도내 1위를 차지했다.

평창경찰서에 따르면 이 기간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법(절도)피의자 등 주요 지명수배자 10명을 검거해 도내 1위를 차지했다.

평창/신현태

경찰청 총경급 267명 인사

원주서장 정인식·강릉서장 이용완

경찰청은 16일 원주경찰서장에 정인식 강원경찰청 112종합상황실장을 임명하는 등 총경급 267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17일자로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 강릉서장에 이용완 강원청 생활안전과장, 태백서장 이종규 강원청 형사과장, 영월서장 엄기영 강원청 경무과장, 정선서장 김진환 경북청 여성청소년과장, 흥천서장 김숙진 강원청 여성청소년과장, 평창서장에 이규문 경찰대 운영지원과장이 각각 발령됐다.

강원청 형사과장에는 김희중 흥천서장, 수사1과장 한상균 경북청 울릉서장, 경비교통과장 박동현 서울청 치안지도관, 여성청소년과장 김종철 경남청 치안지

도관, 생활안전과장 이의신 강원청 치안지도관, 경무과장 홍순광 강릉서장, 청문감사담당관에는 윤원욱 태백서장, 112종합상황실장에는 류성호 강원청 치안지도관이 각각 전보됐다.

또 김광식 평창서장은 서울청 지방자치발전추진단 과장, 김경자 영월서장은 대전청 정보화장비과장, 정경택 정선서장은 제주청 수사1과장에 각각 임명됐다.

남정현 강원청 청문감사담당관, 심현규 수사1과장, 박상경 경비교통과장은 모두 총경 교육에 입교했으며 위강석 원주서장은 오는 12월말 퇴직을 앞두고 공로연수에 들어갔다.

최경식 kyungsik@kado.net

▶프로필 23면

【 2015.07.17(금) 건설경제 】

강원건설단체인협의회 정기회의... 건기법 시행령 등 현안 논의



강원건설단체연합회(회장 오인철)는 16일 강원 춘천 건협 강원도회 2층 회의실에서 제2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등을 보고받은 뒤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2018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해 발주공사에 도내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차부환 한국전기공사협회 강원도회장은 “최근 강원으로 이전한 업체들이 지역의무

공동도급의 제도를 악용해 주소지만 이전한 뒤 수주를 해 토박이 업체들에 피해를 주고 있다”면서 “철세업체들은 공사가 끝나면 기존 지역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지역경기 활성화 측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건연은 도내 업체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국가발주공사라 하더라도 강원도에서 시행되는 사업에는 도내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